

코스피	코스닥
2645.27	773.33
(-9.31)	(-1.32)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610	1427.10
(-0.008)	(-7.20)



주총 화두 ‘미래 경쟁력’... 반도체·IT 전문가 전진배치

산업계 주총, 사외이사 선임 주목
삼성전자·현대차 기술경영 속도
반도체·ICT 등 전문가 대거 영입
포스코·LG도 인재 중용 잇따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도체·IT분야의 전문가를 사내외이사로 적극 영입하는 추세이다.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중용해 회사 미래 먹거리 확보와 이미지 개선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미·중 통상 전쟁 등에 따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를 위해 중장기 포석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주총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사외이사 라인업이다.

삼성전자는 내달 19일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외이사로 반도체 전문가인 이혁재 서울대 교수를 선임한다. 사내이사로는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과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반도체연구소장(사장)이 최근 내정됐다. 지난해 5월 반도체 수장으로 투입된 전 부회장은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1등 자리를 지키는 데 중

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현대차도 삼성전자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반도체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 중심의 경영에 속도를 높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전환과 함께 자율주행 시대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는 내달 20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2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재선임 후보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제외한 4명은 신규 후보다.

신규 사내이사 후보에는 진은숙 현대차 ICT 본부장(부사장)이 올랐으며 도진명 전 쉐컴 아시아 부회장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ICT와 반도체 전문가로 이사회 구성을 강화한 것이다. 진 부사장은 NHN 총괄이사 출신으로 2021년 현대차 ICT본부장으로 합류했다. 지난해 5월부터 ICT를 담당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며 장재훈 부회장은 현대차 사내이사에서 물러나 현대차·기아의 완성차 부문을 총괄하게 된다. 다만 정 회장은 올해부터 기아에서 보수를 받는 것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기아가 내달 정기 주주총회



외화예금 1034억 달러... 13개월 만에 최대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월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거주자 외화 예금은 한 달 전보다 21억4000만 달러 증가한 1034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24년 12월 잔액(1038억8000만 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뉴시스

에서 정 회장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안건을 상정하자 경제개혁연대가 국민연금 등 주주들에게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고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신임 사내이사 후보로 이주태 미래전략본부장과 김기수 미래기술연구원장(그룹CTO)을 추천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불공정거래 적발 시스템 정비 공매도 소송목 전면재개 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 간담회
공매도 과열종목요건 한시 완화
은행 대출, 기준금리 반영 할 때

“공매도 시스템을 1년 넘게 정비한 만큼 일부 종목만 공매도를 재개할 이유는 없다. 대외 신인도 측면을 위해서라도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다시 매수해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통상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활용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증시 급락에 대처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코스피·코스닥 등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후 두 차례 더 연장됐고, 2021년 5월 코스피 200지수와 코스닥 150지수에 편입된 350 종목만 공매도가 허용됐다. 하지만 2023년 11월 다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됐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는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종목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를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

비했다”며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중·소형주에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과거라면 (지정요건에) 적용이 안됐을 종목들도 일정 기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더 면밀히 시뮬레이션을 해서 3월 중에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종목은 다음날 거래가 정지된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 종목의 주가가 3% 이상 하락할 경우 등을 과열 종목 지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대출금리, 기준금리 인하폭 반영해야
이날 김 위원장은 여전히 높은 은행의 대출금리와 관련해 이제는 기준금리를 반영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당국이 (대출 금리에)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금리결정 과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법사위, 거대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 추진

여당·재계 반대 속 개정안 심사
야당 표결만으로 강행 처리 가능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법제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4일 여당과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강행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야당이 표결을 강행한다면 소위 과반 이상 의석을 점한 민주당 표만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가 직무 수행시 특정 주주의 이익에 편향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해 이사의 의사결정이 소수의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해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 모든 주주가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

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 합병 시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기관 평가·공시, 분할 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 20% 우선 배정 등이 담겼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내고 “경제계는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 논의의 즉시 중단과 실질적인 주주권 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메트로 한줄뉴스



▲ 이재명 “상속세 토론”, 여당 “일대일 끝장 토론 하자”
▲ 최상목 대행 “재생에너지 투자 지속... 원전 기술 확보 지원” /사진 뉴시스

▲ 탄핵 최후변론 D-1...尹, ‘진술 요지’ 정리 vs 국회측, ‘핵심 증거’ 서면 제시
▲ 與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에너지 바꾸어 지급 논의중”

▲ 공수처 항의 방문한 與... 나경원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 민주당, “홍준표 복당 개입” 명태균 녹취 또 공개... “하루 다섯번씩 전화 와”